

“합의문대로” 한목소리 비판

여야 4당, ‘합의번복’ 한국당 향해 쓴소리 이인영 “합의 부정 어떤 정략도 타협 못해” 나경원 “추진” 조건부 합의...재협상해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전날(24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사실상 국회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상화 합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기존 합의문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절대 명령이다.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단단히 진척시키겠다”고 뼈대를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 꿈

도 꾸지 말라”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여야 3당 합의문에 대한 당내 추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합의가 무효화 됐다’고 규정하며 민주당과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합의는) 추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합의문 작성에 동참했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원내대표간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포까지 마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도 안 돼 휴지조각을 만들었다.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의 남은 선택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나냐 둘 중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내놓은 선별적 등원에 대해 “국회가 무슨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듣기 싫은 과목은 안 듣는 사실 학원인가. 한국당의 그러한 행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외치면서도 막상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협조 않는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폐기돼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 아닌가. 최근 80일이 넘는 국회 보이콧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일하기에 더 이상 합의 운운할 자격도 없다. 국회법대로 진행하면 된다. 거기에 (한국당이) 들어 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웃는 이인영, 심각한 나경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지만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日 징용판결 보복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상황 악화 방지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옆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보복성 대응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 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장관은 다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외교당국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이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격앙이 된다”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트럼프 ‘DMZ 메시지’에 관심...비핵화 협상 급물살 예고

방한 기간 중 방문 검토...역대 미대통령 필수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방한 기간 중 남북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할 경우 연설 등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DMZ는 방한한 미국 대통령들의 필수 방문 코스다.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1979년), 로널드 레이건(1983년), 빌 클린턴(1993년), 조지 W. 부시(2002년), 버락 오바마(2012년) 대통령 등이 이 곳을 찾았다.

DMZ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 곳을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시점에 DMZ를 방문 “자유와 번영이 남북한민족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서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이곳을 찾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당시 DMZ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열악한 기상 상황으로 방문을 취소했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DMZ를 방문했다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상당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가 2018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반도 상황과 북미 관계는 크게 바뀌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섰고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의 해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친서 교환을 재개하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깜짝 선언’을 하거나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정의에는 경호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tbs라디오 ‘김여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관문집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아든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밝힌 부분이 공통적으로 판문점에서의 민담 제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과 회동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